

차악은 두 나쁜 옵션의 하나일 뿐

정부·여당에서 독립적인 대중 운동을 건설하자

▶ 관련 기사 3면



맞시름2019
찰리 김버 강연

트럼프, 버니 샌더스,
민주사회주의당
(DSA)

6~7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억울한 누명

자본주의 경찰·검찰이
망가뜨린 많은 삶들

2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쿠르드를 또
배신한 미국

4면

기후 위기와
채식

8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윤 시스템이
병 창궐의
근본 원인

9면

차별과 억압,
죽음으로 얼룩진 15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12면

박원순 시장의
서울 버스 개악
계획

5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쓴 윤모 씨 등 경찰과 검찰이 망가뜨린 많은 삶들

김지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 씨는 1988년 13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러나면 서 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다.

윤 씨의 재심은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의 재심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끈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다. 그는 공동변호인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하루빨리 윤 씨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란다.

윤 씨는 체포 당시 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던 21살 청년이었다. 윤 씨는 경찰에게 “자백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은 또한 사흘 동안 재우지 않았고 원래 다리가 불편한데도 쪼그려 뛰기를 시켰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다른 수감자가 차라리 경찰 말대로 하고 감형을 받으라고 한 조언을 듣고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를 중퇴했던 터라 수천만 원의 변호사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2심부터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 조사 당시의 자백만을 인정했다.

화성 연쇄살인은 1986년 9월 최초 발생해 10명이 넘게 살해당했다. 이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자 전두환 정부는 무지막지한 수사를 벌이게 했다. 수사 대상자만 2만 1280명이었고, 용의자로 조사받은 사람도 무려 3000명에 이른다. 윤 씨처럼 경찰 강압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가, 나중에 일본에서 DNA 감정으로 누명을 벗은 사람도 있었다. 용의자로 몰린 이들 중 4명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 또는 자살 기도를 했다.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다.

당시 전두환 정권의 진정한 관심은 독재 정권을 위협하던 대중 투쟁을 분쇄하는 것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경찰력을 대학·거리 시위와 노동자 파업을 진압하는 데 총동원했다.(영화 〈살인의 추억〉은 초반부에서 이 상황을 묘사했다.) 당시 백골단(경찰특공대 산하의 매우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특별 사복경찰 부대로, 은빛 헬멧을 썼다고 해 시위대들이 경멸적으로 불인 별칭)이 악명을 날렸는데, 이들은 곤봉을 휘두르며 무자비하게 시위대와 파업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한국의 형사사법(수사·기소·재판) 기관들은 철저히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정권 비판자들을 탄압했다. 1987년 서울대 학생 박종철 씨가 고문을 받다 숨지자, 검찰과 경찰은 사건을 은폐하려다가 틀음이 났다. 무고한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했고, 허위 자백을 했으며,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이들을 속죄양 삼는 경찰·검찰의 행태는 지금도 계속된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

그러나 책임자들 누구도 제대로 단죄되지 않았다. 그런 기관들 덕분에 권력과 부를 누린 자들이 서로서로 감싸줬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간첩조작 사건을 진두지휘한 검사 김기춘은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이 됐고, 어떤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18년 옥살이를 시킨 판사 출신 여상규(자유한국당)는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이 됐다. 그는 반성하기는커녕, 그 사건에 “책임을 느끼지 못하나?” 하는 기자의 질문에 “웃기고 앉아 있네”라고 막말을 늘어놓는 후안무치함을 보였다.

재심

한국 정치 체제가 권위주의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이행한 뒤에도 이 억압 기관들에 의한 피해자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형사사법 과정의 피해는 단지 군사독재의 유물이 아닌 것이다. 이런 기관의 본질 자체가 폭력적이다.

2002년 김대중 정권 때는 서울지검 특수조사실에서 살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밤샘 수사, 고문 수사 끝에 일어난 일이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상담한 검·경의 인권 침해 내용 중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장시간 조사, 편파·부당 수사’ 유형이 가장 많았다(검찰: 1678건, 경찰: 6427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폭력 앞에 도저히 버틸 수 없었고, 범행을 인정하면 조금이라도 형량이 줄어든 것 같아서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했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에서는 합법적 형기 거래 제도인 플리 바겐이 이런 압박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제대로 된 변호인도 구할 수 없는 가난하고 ‘빽’ 없는 사회적 약자의 말을 경찰, 검사, 언론, 판사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자포자기 심정이 됐을 것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재심 개시 사건의 53퍼센트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경의 강압적 수사과 이로 인한 허위 자백, 법원의 엘리트적 편견에 가

득 찬 판결이 만든 결과다.

그중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과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으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1999년 경찰은 전북 삼례의 한 슈퍼마켓에서 벌어진 강도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10대 소년 3명을 체포했다. 세 명 모두 가난했고 부모나 본인이 장애인이었다. 둘은 초등학교 졸, 한 명은 중졸이었다. 배가 고파 돈을 훔쳤다가 소년원에 다녀온 전과가 있다는 것이 용의자 지목의 배경이었던 듯하다. 경찰은 글을 쓸 줄 모르는 그에게 “보고 그러” 하는 식으로 허위 자술서를 쓰게 했다.

당시 담당 검사는 이들이 지능이 낮아도 범죄 지능은 발달했다는 편견 가득한 논리를 들이밀었다. 사건 1년 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음을 알게 된 피해자는 자기 때문에 청년 셋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 탄원서를 썼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진범들이 붙잡혔지만 검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범과 대질시켜 범행을 자백하는 진범더러 너희는 범인이 아니라고 하고, 누명을 쓴 3명에게 범행을 인정하라고 강요했다. 이 일을 벌인 최성우 검사는 나중에 김앤장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됐다.

2000년 전북 익산에서 택시 기사 살해 혐의로 배달 일을 하던 15세 소년이 체포됐다. 그는 범인의 뒷모습을 본 목격자였다. 그러나 오히려 익산 경찰은 이 소년을 범인으로 몰았다. 경찰은 소년이 범행을 인정할 때까지 때리고 또 때렸다. 공장의 가난한 노동자였던 어머니는 억울했지만 아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나중에 진범이 군산 경찰에 잡혀 자신의 범행을 네 번이나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했다. 군산 경찰은 ‘동료예’를 발휘해 수사를 중단시키고 진범을 찾아낸 형사반장을 파출소로 발령내어 그곳에서 정년퇴직하게 했다. 이 사건을 맡은 형사들은 포상을 받고 승진했다. 진실을 은폐한 검사 정종화, 김효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영전했다.

두 사건 모두에서, 수사 말은 경찰, 기소한 검찰, 판결을 내린 법원이 모두 서로의 ‘위신’을 ‘배려’해 더는 들쭉시지 않고 진실을 계속 덮어버리려 한 것이다.

탈북민도 종종 수사기관의 타깃이 됐다. 2013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화교 출신 탈북민 유우성 씨는 탈북민들의 정보를 북한 정부에 넘겼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 조작과 국정원이 유우성 씨 동생의 허위진술을 강요하며 협박·폭행을 한 일이 밝혀지며 무죄가 선고됐다.

2008년 검찰·경찰·국정원·기무사가 떠들썩하게 발표한 탈북자 원정화 간첩 사건은 대법에서 간첩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오죽하면 이 사건 수사를 처음 시작한 경기도경보안수사대장이 10년 넘게 공안기관의 조작을 주장하고 보수 매체인 〈신동아〉가 이를 보도했을까. 이 수사관은 이후 자살했다고 한다.

적반하장

2009년 쌍용차 공장 점거 파업에 참가했다가 나중에 자살을 시도한 조합원은 유서에서 경찰의 회유 공작을 폭로했다. 거짓이라도 자백하면 원직복직을 시켜 주고 부인하면 구속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파업 대열을 살인적으로 진압한 것으로도 모자라 노동자들의 생계를 두고 거래하려 한 것이다. 이 노동자는 ‘동료들을 팔아먹었다’는 가책을 깊이 느끼다 그런 비극적 시도까지 하게 된 것이다.

같은해 검찰은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으로 철거민들을 죽게 한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검찰은 재판을 위해 3000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도 거부하며 버텼다. 2019년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가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적반하장으로 법적 대응을 암시하며

검찰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찰·검찰 같은 선출되지 않은 수사·정보 기관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 억압 기구로서 체제를 지키는 구실을 한다. 그런 국가기구는 (다른 여러 억압 기구들과 함께) 법·질서의 이름으로 폭력 행사를 독점한다. 이를 통해 권력과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저항을 단속하고 억누른다. 이들의 본질적 임무는 평범한 사람들의 ‘민생 치안’이 아니다. 경찰 내에서조차 교통과가 하바리 보직으로 취급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도 어느 나라나 비슷한 기능을 가진 형사사법 기관들을 갖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도 조작·은폐 문제가 흔히 벌어진다.

예컨대, 미국의 한 사회단체가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 주자며 1992년부터 실시한 ‘결백 프로젝트’로 350명이 넘는 수감자가 풀려났다. 그중 20명이 사형수였다(2017년 기준). 최근 영국에서는 마약 범죄 증거들이 조작됐음이 폭로되기도 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기관들이 진실과 평범한 사람들의 안녕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래서 이 기관들은 “공권력”이 아니라 지배자들의 ‘사권력’으로 불리워야 한다.

억울하게 인생이 짓밟힌 피해자들은 구제받아야 하고, 책임자들은 처벌받는 것이 정의다. 사법기관에 의한 피해가 더는 없으려면 노동자 운동이 이런 기구를 필요로 하는 체제 자체를 조준해야 한다.

추천 도서

《**지연된 정의**》(2016, 후마니타스)는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 등 검찰과 경찰에 의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된 무고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아주 생생히 그리고 있다. 이 사건들의 재심과 무죄를 이끈 박준영 변호사와 박상규 기자가 이 책을 썼다.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

김문성

10월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남겨 둔 공식정치의 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오만과 오판 때문에 우파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진 상황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문재인·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한국당은 조국의 장관직 사퇴가 인사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16일에는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이 대통령 비서실장(노영민)과 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의 동시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지난주에는 취소했던 주말 장외 집회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처리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은 거절했다.

청와대와 조 전 장관은 검찰 개혁안을 재입 중 성과로 삼아 명예롭게 자진 퇴진하는 모양새를 만들려 한 듯하다.(일부 친정부 언론들은 조 전 장관 사퇴가 단지 부인의 건강 악화 때문인 양 무마한다.)

문재인은 조국의 장관직 사퇴 직후 청와대 회의 공개 발언에서 그를 추켜세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삼성, 현대를 연이어 방문하며 재벌 달래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10월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일가를 수사한 특수부를 축소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조국의 개혁안은 그동안 나온 법무부의 개혁안, 검찰청의 자체 개혁안 등과 별반 다르지도 않을뿐더러, 수사 지휘권과 기소독점(기소편의주의와 결합된) 같은 검찰 권력의 골간은 건드리지도 않았다.(설사 건드리다고 해도 검찰의 역

압성과 부패성, 계급성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서초동 시위가 “국민의 뜻”이라던 문재인은 말을 바꿔 오히려 검찰 달래기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의 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국가 관료들 사이의 상명하복 관행에 비춰 보면, 직속 상관을 물러나게 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자리를 지

킬지는 미지수이지만 말이다.

조국의 개혁안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 특수부 등이 하던 수사 일부가 옮겨가는 ‘검찰2일’ 뿐이다. 특수부도 명칭만 바뀔 뿐, 수사권은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조차 검찰의 무엇이 변하는 건지 혼란스러워 한다.

일각에서는 주로 재벌과 고위층 부패 수사를 전담해 온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

령 특수부를 압박하는 탓에 삼성 바이오로지스틱스의 분식회계 수사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 변화를 압박한 가장 큰 요인은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재계의 불안과 압박이었을 것이다. 조 장관 임명 이후 여야 갈등이 격화돼 경쟁적 거리 동원으로까지 이어져 정치 불안정은 심화되고, 국회에 계류된 각종 친기업 개악 법안 통과가 지연됐다. 재계는 이런 상황을 못마땅해 하면서 공개적으로 불평을 해댔다.

문재인은 한국당 재집권에 대한 진보 여론 대중의 두려움을 이용해 그들을 무마하면서도, 기업주들에게 잘 보이려고 친기업 지원에 매진하지는 기조를 여권 전체에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을 통해 한국당 저지,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지지했던 대중에게 작금의 상황은 이중의 실망과 환멸을 안겨 주는 결과일 듯하다. 후보자 지명에서 사퇴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진정한 대의명분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파의 사퇴 요구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조 전 장관 일가의 특권 행사와 위선에 분노하고 비판적이었던 사람들(특히 서민층 청년이) 보기에 지난 35일 간의 정치 드라마는 일종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한국당 집권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야 하나?

조국 사태 국면에서 한국당의 총선·대선 전망이(이전보다) 조금 밝아지면서 반(反)한국당 총의 위기감도 더 커졌다. 조국의 전격 사퇴로 애초에 임명 자체가 문제였음이 입증됐는데도 민주당 차악론이 죽지 않는 이유다.

물론 우파의 재생 조짐은 경계해야 할 일이고, 그 두려움에 대해 좌파가 둔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 문재인이 벌이는 친기업·반노동 행보에 눈감는 것은 자멸적 전략이다. 문재인 지지율 하락이 진보·좌파가 아니라 우파에게 반사이익을 준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

돌아보면, 첫째, **자업자득**. 민주당이 자신들의 계급 특권 향유 행태를 위선적으로 감싸고 그에 대한 조사와 비판을 온갖 수단을 이용해 틀어막으려 한 일에도 환멸이 크게 일어났다. 둘째, 진보·좌파와 노동운동의 대표적 조직들인 정의당·민중당·민주노총은 민주당의 특권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감싸기만 했다. 이는 자신들의 지지 기반(노동계급 등 서민층)을 배신하는 처사였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진보파의 침묵 때문에 우파가 포퓰리즘적 언사로 대중을 동원하는 데에 더 성공했다.

온건 진보파 지도자들이 문재인 정부 지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를 민주당과 한국당의 선거적 대안으로 내

세울 힘과 실력이 아직은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선거제 개혁, 우파 견제, (진보세력에 적대적인) 권력기관 개혁,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따위를 얻어 내는 게 현명하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문제로 내용을 치러 놓고도 정의당은 그의 사퇴 후 공식 논평에서 여전히 조 전 장관(과 그의 검찰 ‘개혁’ 기조와 행보)을 옹호하고 격려했다.

역시 검찰 개혁을 내세워 정부를 측면 지원해 온 민중당은 조 전 장관 사퇴 뒤에야 비로소 이런 논평을 냈다. “사퇴를 촉구한 적이 없으나 그 시점이 언제든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중도 정부의 친시장 개혁에 대한 왼쪽의 반대·견제 압력이 약해질수록 오히려 우파의 우경화 견인력이 힘을 발휘하기가 더 쉽다.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민주당 정부를 지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진보·좌파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대중의 정치의식을 후퇴시켜 저항 동력을 상실케 한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권한 민주당은 늘 이전 보수 정권이 실패한 노동개악을 마저 완수하는 구실을 해 왔다. 1998~2007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김영삼 정부가 민주노총 파업(1997)에 밀려 실패한 노

동법 개악을 실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노동개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차악론은 이에 대한 경계와 반대를 무디게 한다. 민주당 소속 대통령들을 지지했던 노동계급과 서민층 대중은 배신감과 환멸을 느끼게 된다.

둘째, 민주당 차악론을 받아들일수록 진보·좌파가 스스로를 우파에 맞선 대안으로 내놓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일종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공식 정치에서 민주당 VS 한국당으로 양극화돼 이분법적 진영논리가 지배하면, 1인 2표는 민주당 지지층이 진보·좌파 정당에 표를 나눠 주는 게 아니라 그 정반대 현상을 낳는다. 선거제가 바뀌어도(양대 정당으로 인한 압착 때문에) 사표 논리는 남는 것이다.

역사에서 배우기

진보파 지도자들은 노무현 정부 후반에 민주노총이 먼저 약화되고, 그에 기반을 둔 민주노동당이 노무현의 열린우리당과 동반 추락한 일에서 배워야 한다. 최근 노동자들의 투쟁-교섭-합의(불만족스런) 상황을 봐도 조국 사태 국면에서 더욱 두드러진 민주당 차악론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다.

사실 서초동 집회는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 문

제로 진작에 분화했음이 확인된 계기였다.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중도 보수층 일부는 광화문 집회에 공명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을 주도했던 진보계와 노동운동은 이 국면에서 무기력했다. 정치적 분화를 받아들이고 노동운동이 독자적 목소리를 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대표성, 상징성을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진짜 문제는 조국 문제만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정의당·민중당·민주노총, 노동계 3대 조직은 반노동을 노골화하는 현 정부와 정치적으로 단절하고 전면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아직도 호소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법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간 개악 등을 서둘러 통과의사키려 하는 판국에 말이다.

국민연합에 따른 연립정부 참가 전략과 관련해 역사에서 배울 교훈이 있다. 그것은 그런 전략이 친자본주의 세력과 동맹에 묶여, 진보적 변화의 동력이 될 기층 운동을 정치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자기 무덤을 파왔다는 것이다. 1936~1937년 스페인에서, 1936~1937년 프랑스에서, 1970~1973년 칠레에서.

이런 기회주의는 진보적 사회 개혁의 진정한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다. 개혁주의는 자본주의 국가가 민주화되면서 그런 개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집권을 위해서는 일정한 후퇴와 양보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전략은 예외없이 실패했다.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 자체의 성격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진보적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개혁 시도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억누르기 위해 존재하는 정치조직이다.

한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노동자 조직의 성장으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절차적 개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검찰의 힘이 강화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선출된 정부가 자본주의 국가에 적응해 자본주의를 운영(위기에서 구출)하게 되는 것이지, 그 반대도 아니다.

따라서 부분적 개혁조차도 국가 바깥에서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체제에 큰 위협을 제기할 때 얻어 낼 수 있다(경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특히 그렇다.)

그렇게 하려면, 한국당 집권 후의 반동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문재인이 벌이는 촛불 염원 배신과 반동(미사여구와 웃는 얼굴로 하는 반동)에 맞서야 한다. 노동자들이 왼쪽에서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공격할 때 우파도 곤란해진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쿠르드를 또 배신한 미국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터키의 시리아 북부 침공을 막아 온 미군을 철수한다고 결정하자 쿠르드가 이끄는 시리아민주군(SDF)은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지당한 비난이다.

시리아민주군은 미국이 시리아에서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를 토벌할 때 핵심 현지 동맹이었다. 트럼프는 쿠르드가 “제2차세계대전 때 미국을 돕지 않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둘러댔다.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다.

노르망디에서 30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네 국가에 지배당한 나라 없는 민족이 어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군대를 보낼 수 있었겠는가?

시리아민주군과 함께 활동한 여러 전·현직 미군 장교들을 인터뷰한 《포린 폴리시》는 이렇게 전했다. “그들은 터키가 쿠르드 군대를 도륙하는 것을 미국이 방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여러 명이 뼈아픈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

한 장교는 이렇게 말했다. “미군 한 세대 전체가 이 배신을 잊지 못할 것이며, 이 일에 대해 끊임없이 용서를 빌 것이다.”

사회주의자와 반(反)제국주의자의 주된 임무는 터키의 침공에 반대하고, 쿠르드에게 연대를 표하며, 쿠르드의 민족자결권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일에서 교훈을 얻기도 해야 한다.

미국이 쿠르드를 배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역사가 그렉 그랜딘은 헨리 키신저(닉슨과 포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다)를 다룬 자신의 명저를 페이스북에서 인용했다.

1970년대 초 키신저는 “이라크 바트당 정권을 흔들기 위해 이란 샤 왕조와 손잡고 쿠르드를 지원하는 계획을 꾸렸다. 쿠르드에게 무기를 줘서(미국 국무부를 놀래지 않으려고 이스라엘이 무기를 제공하게 했다.) 이라크 북부에서 독립 전쟁을 벌이게 하는 계약이었다.”

“1975년 12월, 이란과 이라크의 세력 균형이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해졌다고 판단한 키신저는 쿠르드 지원을 철회했다. 이라크 정부는 재빨리 맹공을 퍼부어 수많은 쿠르드인을 학살하고 인종 청소를 자행했다. 아랍인들을 대거 쿠르드인 거주 지역으로 이주시켰고 쿠르드인 수십만 명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의존

그럼에도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민족주의자들은 미국에 대한 의존을 끝내 버리지 못했다. 쿠르드민주연합과, 그 연합의 군사 조직이자 시리아민주군의 핵심 전력인 인민수비대(YPG)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민족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운동을 벌였다.

《포린 폴리시》가 인터뷰한 미군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장교들은 인민수비대가 해방시킨 지역에서 보여 준 정치 운영 능력을 찬양해 마지않았다.

인민수비대는 쿠르드노동자당(PKK)의 동맹이다. 쿠르드노동자당은 터키 내 쿠르드 지구에서 오랫동안 무장 항쟁을 벌여 왔다. 바로 쿠르드노동자당과의 관계 때문에 인민수비대는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의 분노를 샀다. 에르도안과 그와 가까운 군부 인사들은 국경 너머 시리아 북부에 쿠르드 자치구가 공고해지면 쿠르드노동자당이 더 강해질 것을 우려한다.

운신의 폭

시리아민주군이 누린 정치·군사적 운신의 폭은 더 강력한 세력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한편에서는 잔혹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혁명이 벌어지자 시리아 내 쿠르드 지역을 포기했다. 혁명적 무장 조직들에 대처하는 데에 힘을 집중하고 그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였다.

다른 한편에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와 뒤이어 들어선 트럼프 정부는 시리아민주군이 아이시스 격퇴에 유용한 동맹이라고 여겼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미국은 쿠르드를 배신했다. 이번 사태를 볼 때 지나치게 트럼프에게만 초점을 맞추려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심증팔구 오바마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전략·정보 웹사이트 〈스트랫포〉는 미국의 결정에 깔린 냉혹한 논리를 이렇게 풀이했다.

“백악관은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면 충직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국지적 동맹을 방어하기보다는, 중대한 전략적 동맹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를 택해 왔다. 터키는 국경 지역 장악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커다란 위험도 무릅쓸 용의가 있는 반면, 미국은 이미 시리아를 뜨려고 하고 있었고 국경 문제로 터키와 충돌하고 싶어하지 않는 듯하다.”

이제 시리아민주군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이제 쿠르드는 터키의 맹공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리아인 수십만 명을 살해한] 아사드 정권과 협약을 맺었다.

제국주의 열강과의 동맹에 기대는 실수 때문에 이토록 엄청난 고통을 대가로 치러야 하다니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76호 / 번역 이원웅



시리아 북부를 통과하는 미군 차량들 미국은 중동에서 군사 개입을 줄이려 하지만 중동을 아예 포기할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시리아 철군에서 드러난 미국의 곤혹스런 처지

이원웅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터키의 시리아 침공에 청신호를 준 것이 미국 권력층 전반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함께 트럼프를 비난하며 터키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화당 내 친(親)트럼프계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조차 트럼프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압력을 받았는지 트럼프는 터키에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제재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미국 권력층은 이전에도 시리아 철군 문제로 심각하게 다툼 바 있다. 지난해에는 트럼프가 갑자기 시리아 철군을 발표한 것에 항의해 제임스 매티스가 국방장관에서 사퇴했다.

주류 정치권·언론 전반이 트럼프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철군을 강행해 동맹인 쿠르드인들을 터키에게 넘긴 트럼프의 결정이 단지 그의 유별난 개성이나 ‘미국 우선’ 노선 때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집권했더라도 트럼프와 다른 선택을 할 여지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시리아 철군을 둘러싼 갈등은 미국이 중동에서 처한 곤혹스러운 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전임 버락 오바마 정

부 때부터 중국이라는 더 큰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중동 개입을 줄이려 해 왔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해외 전쟁에 대한 오바마와 트럼프의 차이는 대체로 스타일 문제다. 본질적으로 트럼프는 오바마의 연장선상에 있다.”

물론 미국은 중동을 아예 포기할 수 없다. 중동은 그 자체로 세계 패권 유지에 중요한 곳이다.

트럼프의 중동 정책도 미국의 이런 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으로 트럼프는 중동에서 군사 개입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같은 기존 동맹국들과 관계를 다지고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런 정책은 결과적으로 중동의 긴장을 악화시켜 중동에서 군사력을 철수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

시리아 철군으로 미국은 중동에 개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현재 터키의 군사 작전이 보여 주듯 그 공백을 주변의 여러 강국들과 다른 제국주의 열강이 메우려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상황은 더 불안정해질 것이다. 특히 미국 지배자들은 이란과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한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철군을 강행한 것은 미국 제국주의가 직면한 힘의 한계를 고려한 것일 테다.

트럼프가 터키의 시리아 침공에 직

면해 맞닥뜨린 모순은 오바마가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실패 이후 직접적 군사 개입을 꺼리게 된 미국은, 아이시스가 부상했을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모든 주변 국가들은 저마다 우선순위가 달랐고 아이시스를 가장 큰 문제로 여기지도 않았다. 예컨대 터키는 쿠르드인들을 더 큰 문제로 봤고,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아이시스를 어느 정도 용인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아이시스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미국은 결국 쿠르드인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다.

이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터키의 반발을 샀다. 그리고 터키가 쿠르드인들을 억누르고 국내 경제적·정치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시리아 침공을 강행하려 하자, 트럼프는 선택을 해야 했다. 물론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터키가 “선을 넘으면” 터키 경제를 “없애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말이다.

이처럼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과 이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의 상대적 약화라는 더 큰 현상의 일부일 뿐이다. 패권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 지역 강국들의 경쟁과 갈등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난민이 될지도 모른다.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wspaper.org

-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 트위터 @wspaper

온라인 구독 방법 한 눈에 보기 wspaper.org/online



박원순 시장의 서울 버스 개악 계획

“경영 효율화, 경쟁 확대”는 공공교통을 악화시킬 것이다

장호중

서울시(박원순 시장)는 10월 13일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이겠다는(“합리화”) 것이다. 특히 영수증만 제출하면 전액 지원하던 인건비와 연료비를 사전에 정해서 지급하겠다고 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는 운송원가의 80퍼센트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준공영제로 서비스 개선 등 일부 성과를 보였지만 버스회사의 경영이 개선되지 않아 보조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지 못했이라며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 보조금 중 일부가 낭비됐다는 얘기는 사실이다. 특히 버스회사 경영진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됐다. 2014년 서울시 국감 결과를 보면 버스회사들이 ‘정비직 인건비’로 받은 보조금을 덜 지급해 총 44억 원을 ‘수익’으로 남겼다. 반면, 서울시가 산정한 임원 인건비는 86억 원이었지만 실제 지급액은 262억 원이었다. 버스 정비 등을 위해 지원한 돈을 경영자들이 챙긴 것이다.

보조금

정부 보조금에는 이 외에도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돈이 포함돼 있는데 2015년 감사원은 이 이윤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기업주들은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부를 늘려 온 것이다.

따라서 이런 편법을 규제하고 필요



사진 출처: Hyeon2

서울시, 버스 기업들 모두 노동계급의 부담을 줄이는 데는 진정한 관심이 없다

하다면 보조금을 환수할 필요도 있다. 문제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는 정작 이를 막는 조처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상태에서 보조금 총액만 줄이면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 논리상 인건비를 줄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를 표준원가 방식으로 전환하면, 버스 업체의 경

우에는 운전직 노동자들을 줄이기 위해 배차간격을 조정하거나 혹은 촉탁직 등 질 낮은 일자리를 만들어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공공교통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준))

대부분의 공공서비스가 그렇듯 인건비 절감 압력은 서비스의 질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안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실제 서비스 개선보다 경영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에 사용된 근본 원인은 ‘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에 도입됐다. 서울시가 버스 노선과 배차 ‘조정권’을 갖는 대신 민간기업인 버스 회사 65곳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버스회사들은

독점적인 면허권과 노선권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이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는 셈이다.

수입금을 서울시와 버스회사들이 공동으로 관리한다지만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수공위)는 버스회사 경영자들의 단체인 버스조합 산하 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2004년에 서울시와 버스조합이 체결한 협약서는 “버스업체들의 경영권과 적정 이윤 보장이 핵심적으로 제시되었고 규제기관으로서 서울시의 역할도 불분명”한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갱신이 되지 않았다.(이영수, ‘버스준공영제 운영실태와 공공성 강화방향’, 2018)

그야말로 시민의 발을 불모로 기업주들이 정부 재정을 뜯어먹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재정 지원이 서비스 개선에 온전히 사용되기 어렵다.

게다가 필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파리, 런던, 뉴욕 등의 대중교통 예산에서 요금 비중은 50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반면,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재정지원 비율은 16퍼센트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걸핏하면 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그나마 부족한 보조금이 기업주들의 배만 불리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버스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 지하철처럼 말이다. 기업주와 부자에게서 세금을 거둬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김현옥 전교조 조합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는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조국 사태로 교육이 특권 대물림 수단이었음이 드러나 청년들이 분노하자, 이런 불만을 무마하고자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교육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심사에서 탈락한 전주 상산고를

구제해 준 게 바로 정부였다.

1년 전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내놓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수능 정시 전형 3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 상대평가 유지)도 치열한 입시경쟁과 교육 불평등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문재인 스스로 입시제도 재검토를 주문한 것이 역설적으로 이를 보여 준다.

올 11월에 내놓겠다는 방안도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난 2025년 또는 2028학년도에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약속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은 조국 사태에 대한 몰타기일 뿐 진정성을 느끼기 힘들다.

한국당 등 우파들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 부분이 부모의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 “정시 확대로 공정성을 확보”하자고 주장한다. 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에 반대

한 한국당은 역접제도 청년들의 상실감을 이용해 정시(수능) 확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자녀 특혜 의혹 등을 보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서울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수능 중심의 정시 비율이 늘어날 경우 자사고 학생과 강남 학생들의 입학 비중이 급증한다. 이미 현실에서는 자사고,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주로 수능 사교육에 의존해 서울대에 입학하고 있다. 수능을 ‘금수저 전형’이라고 하는 이유다.

물론, 학종도 자사고·특목고에 유리하다. 2017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현황’을 보면, 서울대 입학생의 50퍼센트 이상이 학종을 통해서 선발되는데, 이 중 64퍼센트가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다.

따라서 현 입시체제 하에서는 수능이든 학종이든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

다. 애초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따라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다.

기울어진 운동장

그런데 진보진영의 최근 논의도 학종이나, 교과나 하는 논의에 머물고 있다. 현실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말이다.

10월 10일 전교조가 주최한 ‘대입제도 개선 및 교육개혁방향 토론회’에서도 정시와 수시의 비율, 수시에서 학종과 교과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가 주로 논의됐다. 물론 참여자 대부분은 국공립대 네트워크와 수능 자격고사화처럼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주장했지만, 이는 먼 미래의 대안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학종 강화나 내신 교과 강화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학종 비교과 영역의 스펙 쌓기 경쟁

처럼 입시가 복잡해질수록 경제력과 정보력이 뛰어난 상위층 가정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내신 강화도 사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 서열화와 자사고·특목고의 고교서열화에 대해 도전하지 않고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길란 불가능하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현실적 대안’ 찾기에 골몰하기보다는 그동안 제안된 대학 평준화, 입시 폐지 등을 주장해야 한다.

진정한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독립적으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조국 사태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정부가 위기 탈출용으로 꺼내든 입시개혁 카드에 진보진영이 호응할 이유가 없다. 전교조는 범외노조 철회, 교원평가 폐지, 특권학교 폐지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운동 속 논쟁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채식을 해야 할까?

장호중

“멸종하기 싫으면 탈육식하라”

〈한겨레〉 10월 5일치 오피니언란에 실린 한 칼럼의 제목이다. 이 칼럼의 필자는 같은 메시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9월 21일 서울 혜화동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에도 참여했다. 이 밖에도 채식 운동가들과 동물보호 활동가 수십 명이 이날 집회와 행진에 참가했다.

오늘날 뉴스와 다큐멘터리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장형 축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축산업 자본가들을 제외하면) 많지 않을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확대당하는 동물을 보거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때문에 살처분되는 가축들을 보면 역겨움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런 이유로 채식을 선택하는 이들도 많다. 이런 선택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

다만 채식을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여겨 이를 운동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중 일부는 위의 구호를 보며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고 또 다른 일부는 반발감이 들기도 했을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을 꾸짖는 듯한 구호에 언짢음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채식을 기후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 기후 운동 내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다. 권위 있는 연구 기관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2014년에 낸 보고서에서 농업과 산림, 그 밖의 토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4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IPCC는 올해 8월 ‘기후변화와 토지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세계식량농업기구의 2013년 발표를 인용해 전 세계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제출한 107명의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를 저지하려면 붉은 고기를 적게 먹고 통곡물과 채소, 과일 위주의 식물성 식단을 먹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올해 초 저명한 국제학술지 〈랜싯〉에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표준 식물성 식단’이 실리기도 했다. 이는 〈랜싯〉에 2년간 실린 연구 결과 357건을 바탕으로 ‘이트-랜싯(EAT-lancet)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다. 이 위원회는 국가별 식단에 분석했는데 한국 등 동북아시아 나라들에서는 붉은 고기를 표준 식물성 식단보다 약 네 곱절이나 먹는다고 보고했다. 즉 다 같이 고기 섭취량을 4분의 1로 줄이거나, 전 국민의 4분의 3은 채식을 하라는 얘기다.

심지어 맥도날드가 채식 버거를 내놓고, 테스코, 막스앤스펜서 등 다국적 식품 기업들이 앞다퉈 채식 상품을 늘



9월 21일 서울 혜화동에서 열린 ‘기후 위기 비상행동’ “기후 위기는 이윤체제 때문이다”

리는 등 오늘날 채식은 건강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권장되고 있다.

정말로 채식을 하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우리 모두 채식을 해야 할까?

자본주의와 농업

먼저 큰 틀에서 살펴보면 축산업을 포함한 현대 자본주의 농업이 갈수록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점점 더 많은 곡물이 가축 사료와 바이오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2011년 미국에서 소비된 옥수수의 44.7퍼센트가 에탄올 생산에 투입됐다. 사료용은 42.7퍼센트, 식품은 12.3퍼센트를 차지했다. 〈나라경제〉 2012년 10월호) 농업과 토지 이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 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그 배출량은 (아직) 적지만 이산화탄소에 비해 23배나 강력한 온실효과를 낸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 동안 대기 중에 남는 반면, 메탄 가스는 수십년 안에 분해된다고 알려져 있다.

둘째, 농지 확장은 산림 파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2000~2012년 사이에 사라진 열대 우림의 71퍼센트가 농지 확장으로 인한 것이었다.

셋째, 현대 농업 전체가 화석연료 사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비료, 농약 등 농작물을 기르는 단계에서뿐 아니라 이를 수확하고 포장해 배송하는 과정 전체가 화석연료에 의존한다. 세계

식량농업기구와 IPCC의 보고에서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 과정을 대부분 포함한 것이다. 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비해 많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육류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축산업 중에서 소가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인 것도 사실이다. 소고기 생산은 축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전체 배출량의 14.5퍼센트) 중 41퍼센트를 차지한다. 우유 생산에서 20퍼센트가 배출된다. 다만 그 양은 좀더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브라질 등 남아메리카의 소고기 생산이 전체 소고기 생산 부문의 31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는 이산화탄소 10억 톤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 지역의 소고기 생산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소가 사료를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메탄이 있다. 이는 이 지역의 소고기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30퍼센트를 차지한다. 따라서 단순히 계산하면 고기를 얻기 위해 사육되는 남아메리카의 소들이 배출하는 메탄 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78퍼센트 가량이다.

둘째, 소를 키우기 위해 숲을 제거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과정, 소의 배설물을 비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소고기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23~40퍼센트를

차지한다.(전체의 1.36~2.38퍼센트)

이곳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는 단지 소를 없애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현존 기술을 보급하는 것만으로도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18퍼센트가량 줄일 수 있다. 그 기술을 도입하면 이윤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기업주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토지 이용 방법을 바꾸거나 몇 가지 작물을 활용해 토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의 사용 여부는 각국 정부와 시장에 내맡겨져 있다.

실제로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가 있다. OECD 나라들에서 키우는 젓소는 전 세계 젓소의 20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이 젓소들이 생산하는 우유는 전 세계 우유 생산량의 73퍼센트나 된다. 따라서 같은 양의 우유를 얻기 위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도 평균보다 크게 적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사료를 개선하고 분노 처리 방식을 바꾸는 등 몇 가지 간단한 조치들만으로도 우유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4~5퍼센트가량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료인 곡물을 키우는 데 투입되는 합성비료와 농약, 각종 설비에 투입되는 연료,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등을 고려하면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브라질

물론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 부문에서 단지 특정 기술을 도입해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일 것이다. 이는 농·축산업 부문에 비해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력 생산이나 수송 분야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술적 대안은 이미 존재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를 선택할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과(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기업주들이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다. 한 세기 넘도록 어마어마한 자본을 화석연료에 투입해 세계 경제에 막대한 권력을 행사해 온 화석연료 연관 기업들(석유, 자동차,

농화학, 유통 등)이 이런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우리 식단을 바꾸는 것으로는 이들에게서 권력을 뺏을 수 없다. 요컨대 우리가 채식을 한다고 자본주의가 화석연료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채식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불편함과 비용을 감내하는 일이지만 자본주의 체제는커녕 한 지역의 축산업에 끼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 채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전세계적으로 늘고 있지만 육류 소비량과 화석연료 소비량은 계속 늘고 있다.

오늘날 육류 소비가 크게 늘고 이를 위해 엄청난 양의 곡물을 생산하게 된 데에는 화석연료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가 폭탄을 생산하려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화학공장들은 전후 농화학 기업들에게 헐값에 넘겨졌다. 카길과 몬산토 같은 농업·농화학 기업들이 세계 식량 생산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배경이다.

이들이 생산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합성비료와 농약, 플라스틱, 항생제, 유전자변형종자 등은 축산업과 농업의 형태를 세계적 수준에서 크게 바꿔놨다. 선진국의 규제를 피해 남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로 생산지를 옮긴 농화학·축산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산림 파괴를 일으켰고, 자본 이전을 핑계로 삼은 선진국에서의 규제 완화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공장형 축산을 촉진했다. 투입 비용 대비 이윤이 모든 것에 앞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에 따른 결과다.

따라서 체제와 그 논리에 맞선 저항을 건설하는 것만이 기후 위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9월 20~27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수백만 명의 기후변화 시위는 희망을 힐끗 보여 줬다. 영국의 멸종저항 시위대는 10월 7일부터 다시 런던 도심 점거 시위에 나섰다.

반면 채식을 대안으로 삼는 것은 앞서 살펴봤듯이 효과적인 수단도 볼가 피한 선택도 아니다.

무엇보다 이는 운동의 초점을 진정한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와 그 지배자들에 맞선 투쟁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식생활로 향하게 하는 효과를 낸다. 그러면 바뀌야 할 것은 자본주의 체제와 권력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이 된다. 이는 저항의 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사회 변화에 필요한 잠재력을 가진 노동계급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더 근본적인 문제에 도전해야 한다. 가속하는 기후 위기를 멈추려면 자본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 이 기사는 마틴 엠스 등이 쓴 (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 : A Revolutionary Response to Environmental Crisis)를 많이 참고했다.



닭 농장 닭고기 생산을 위한 사료 생산과 항생제 사용은 기후변화 뿐 아니라 광범한 환경 파괴를 낳는다

사진 출처: Larry Rasmussen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윤 시스템이 병 창궐의 근본 원인

김무석 건국대학교 수의대 학생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질병이 멧돼지와 사육돼지 모두에게 감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이다. 사육돼지 관리를 해도 멧돼지 사이에서 질병이 남아 있으면 다시 사육돼지에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야생 멧돼지 관리가 필수적이다. 최근 정부가 야생 멧돼지를 '박멸' 수준으로 살처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다.

물론 한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병이 야생 멧돼지 때문인지, 인간을 통해 오염된 식품 공급 때문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민통선 주변 야생 멧돼지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고 있고 주요 질병 발생 지역이 경기도 북부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야생 멧돼지를 통한 전파와 감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사실 그동안 한국에서 야생멧돼지 발병이 보고되지 않은 것은 검사 역량 자체가 부족해서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을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은 정규직 7명과 비정규직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현장에서 근무 중인 수의사는 팀 내 1명뿐이다. 멧돼지 폐사체 탐색을 충분히 할 인력이 없는 것이다.

첫 발병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제로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다섯 곳의 양돈농가 간 직·간접적인 차량 교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살아 있는 동물을 옮기는 경우는 물론, 분뇨나 사료를 실은 차량도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벨기에의 경우 차량의 바퀴나 신발의 밑창 등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소독 작업이 충분히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최농훈 건국대 수의대 교수는 지난 8월 열린 축산현장 방역 관리 세미나와 이후 인터뷰를 통해 현장 방역의 문제들에 대해 지적해 왔다.

구명

첫째, 소독약 허가를 위한 표준시험 조건을 통과하려면 소독약으로 4℃에서 30분간 처리했을 때 소독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방역현장에서는 1분 만에 소독이 이뤄지고 있고, 겨울철 기온은 영하로 내려간다.

둘째, 현재 차량 소독 시설은 상당수가 안개 분무 방식으로 가동되고 있다. 고압 살수로 차체에 붙어 있는 유기물 덩어리를 제거해야 제대로 된 소독이 될 수 있다.

셋째, 축산 농가는 물론이고 정부가 운영하는 거점소독시설조차 소독제의 적정 희석 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조사한 농가



윤커뮤니케이션

전염병과 이윤 논리 부족한 안전 인력, 미비한 시설 투자는 위험한 먹거리를 계속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와 거점소독시설의 절반 이상이 적정 농도 희석을 못 해 효과가 없는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소독약 희석 농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이유는 적절한 농도를 확인하는 키트나 점검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구제역과 조류독감을 비롯한 여러 전염병이 문제가 된 바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키트 개발이 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넷째, 축산 차량은 분뇨가 새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함에도 배관을 설치해 도로 위에 분뇨를 뿌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생축(살아 있는 가축) 차량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생축은 소독이 불가능한데, 모든 축산 차량이 일괄적으로 거점소독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요컨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정부도 이런 점을 알지만 인력과 투자 부족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다 보니 대대적인 살처분에 의존하고 있다.

살처분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동물들을 살처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가 인근 500미터 지역을 넘어 10킬로미터로 살처분 지역을 확대한 뒤 아예 발생 지역 전체로까지 살처분 범위를 늘리는 것은 과도한 조치다. 앞서 지적했듯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접촉 감염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구제역과는 달리 소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시설과 기술에 대한 투자가 훨씬 중요하다.

야생 멧돼지의 경우도 정부의 사전 감시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제 와서 야생 멧돼지를 모조리 죽이겠다는 식의 대책은 필요없었을지 모

른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기간 차이가 있지만 이 전염병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에 지적된 많은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통제는 상당 부분 운에 맡겨야 할 상황이다.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돼지가 불필요하게 살처분될 것이고 전국으로 확산되면 더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될 수 있다. 돼지고기 등 식료품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세계화와 이윤 중심주의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이었고, 여전히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관련기사: '아프리카돼지열병 한국 첫 발생 — 자본주의가 부추긴 질병의 확산', <노동자 연대> 298호) 이 확산이 언제 멈출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언젠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라도 먹거리 공급을 자본주의와 시장에 계속 맡겨 둔다면 비슷한 일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윤 논리 때문에 정부와 기업들이 일상적으로 전염병 예방에 인력과 자원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는 커녕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완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윤이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전염병에 대처하기 쉬운 사육 방식이 발전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인류의 전염병 대응 역량을 늘려나가야 한다. 개별 사안이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어야 한다.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보다 군사비에 대한 투자와 기업 간·국가 간 경쟁이 우선되는 자본주의가 끝장나고, 직접 생산자들(노동자들)이 사회를 운영하는 사회주의 사회가 돼야 이런 역량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야생 멧돼지가 어쩌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2주에 한 번 꼴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최신 동향을 보고하고 있다. 최신 보고에 의하면 9월 27일~10월 10일에 전 세계에서 새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507건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사육돼지에서 발병 보고가 더 많은 반면, 유럽에서는 주로 야생 멧돼지에서 발병 보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는 2017년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가 진행한 조사에서 100ha당 5.6마리로 나타났다. 1985년 2.4마리에서 30년 사이에 두 배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산림지대 멧돼지가 농가에 피해를 주는 일은 1970년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벌어져 온 일인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도시에도 멧돼지가 출몰하기 시작해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멧돼지의 개체수가 늘어난 것은 상위 육식 포유류의 멸종과 관련이 있다. 단기간의 이익을 위한 서식지 파괴와 밀렵 등으로 곰이나 늑대, 여우, 호랑이 같은 육식 포유류들이 멸종하자 멧돼지의 개체수가 점차 늘어난 것이다. 또 환

경 파괴로 서식지가 줄어들거나, 먹이가 되는 씨앗이나 열매를 과도하게 채집해서 먹이가 줄어들면 인간 거주지역에 멧돼지가 더 나타나게 된다.

멧돼지의 개체수와 행동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더라도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자연과 동물(인간을 포함해)은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동물에 대한 극단적 조치를 취할 때 직접적 효과 외에도 시간을 두고 벌어지는 여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지속적인 경쟁 압력 때문에 단기적 이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소홀하다. 이윤 추구 압력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에도 고스란히 가해진다. 앞서 소개한 한국 멧돼지의 서식 밀도는 2017년에 27명의 조사원이 포유류 24종, 조류 227종 등을 함께 조사한 것의 일부다. 생태계에서 자연과 동물(인간을 포함해)들이 맺는 긴밀한 관계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려면 더 많은 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10월 15일 홍익대학교 홍문관 앞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한 홍익대 당국을 규탄하고, 2심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자·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10월 24일 2심 공판 기일을 앞두고 열린 것이었다.

2017년 홍익대 당국은 노동자 7명을 고소·고발했다. 2016년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본관 농성과 항의를 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에 항의 농성한 게 왜 문제인가? 홍익대의 고소·고발은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였다.

검찰은 7명 중 3명을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청소 노동자에게 벌금 200만 원(선고유예 2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집행유예 1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차장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악랄한 검찰

분회장과 조직차장은 부당한 선고에 항소했다. 그런데 선고유예를 받은 청소 노동자는 검사 측이 항소했다. 양형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자·학생 50~60명이 참가했다.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와 모든 단과대학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학회, 동아리와 공공운수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조차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10월 15일 홍익대 정문 앞 기자회견

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를 비롯한 노동조합 17곳, 시민사회단체 수십 곳 등 무려 56곳이 공동주최했다.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닥불’(이하 모닥불) 김민석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박진국 홍익대분회장은 말했다. “우

리는 총장을 만나려고 한 것이지 폭력이나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았습나다. ... 억울해서 이 싸움 이길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박승리 총학생회 인권연대국장은 노동자와 학생의 조건이 서로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류기환 서울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

장은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더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필자도 ‘모닥불’을 대표해 발언했다.

“법은 왜 기업인과 부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노동자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것입니까? ... 장시간 저임금, 고된 노동강도로 노동자들을 몰아넣

은 학교가 유죄입니다.”

한편, 이준 정의당 홍익대학교 학생위원회 위원장은 홍익대 당국의 고소·고발이 문재인 정부의 쟁의행위 위축 시도와 맥을 같이 한다고 옮겨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ILO 비준을 한답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쟁의를 더욱 많이 범죄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유효 기간도 3년으로 늘리고 대체 인력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시설 점거도 금지시키겠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대 생협 노동자 파업이 승리하고, 연세대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첫 투쟁에 나섰다.

홍익대 노동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대학 당국들은 이를 이용해 열악한 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위축시키고 임단협에서도 노동자들을 압박하려 들 것이다.

홍익대 당국은 경비 인력 충원과 휴게실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올해 4월 과로한 홍익대 경비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기자회견 후 학생과 노동자 수십 명이 문헌관까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우리의 투쟁은 정당했다! 2심 무죄 판결을 촉구한다!”

법원은 노동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더 많은 학생들이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김지은 홍익대학교 학생, 노동자연대 회원

화물 노동자 파업

“10년 동안 물가 올랐는데도 운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8일 전국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하루 파업을 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를 다시금 촉구한다.

안전운임제는 운임(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적정운송료를 정부가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2년 화물연대 출범 이래 줄곧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로 제기돼 왔다.

2018년 3월 국회에서 ‘안전운임제’가 포함된 법이 통과됐지만, 애초 노동자들의 요구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이 었다. ‘안전운임’이 전 차종, 전 품목에 도입되지 않고, 컨테이너 수출입 차량과 시멘트 운반차량(전체 40만 화물차량의 1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에만 적용됐다. 다른 부문은 운임 산정 시 ‘참조’(즉 강제력이 없는) 사항인 ‘안전운송원가’만 공표한다. 그조차도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시행 후 지속·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일몰제’다.

화물 노동자들이 적정임금 보장을 요구해 온 이유는 지입제, 다단계 구조의 폐해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떠넘겨져 왔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김근영 인천지부장이 전하는 현실은 이렇다. “운송업체가 국

토부에 보고하는 тари프(TARIFF, 구간별 컨테이너 육송운임표)상으로는 인천과 부산을 왕복하면 135만 원 정도의 운임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받는 운임은 90만 원 정도입니다. 운수업체가 화주에게 10~40퍼센트를 할인해 주고, 우리 월매출의 10퍼센트 정도를 떼어갑니다.”

운임표상 운임의 66퍼센트 정도만 화물 노동자의 손에 쥐어지는 셈인데, 심지어 50퍼센트밖에 못 받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한 화물 노동자는 안전운임을 제대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한다. “10년 동안 차량 가격, 부품, 생활물가 모두 올랐는데, 운임은 오르지 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매달 수백만 원의 장기할부금도 내야 하니 한탕이라도 더 뛰려고 차 안에서 쪽잠 자면서 버티는 거죠.”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안전운임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10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하루 파업은 이를 앞두고

안전운임을 제대로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행동이다.

현재 안전운임위원회의 논의는 노동자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은 마땅히 포함돼야 할 보험료, 출퇴근비, 숙박비 등을 빼 어떻게든 운임을 낮추려고 혈안이 돼 있다.

김근영 지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전에 4000만~5000만 원 하던 차값이 지금은 보통 2억 원이 넘어요. 한 번 사고 나면 4000만~500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죠. 그런데 운수업체들은 노동자들이 민간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회방을 놓아요. 수리비를 주거나 자차보험에 가입하게 해달라는 건데 그것도 거부하니 사고 나면 우리만 죽어나는 거죠.”

“화물차를 집앞 골목에 주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정된 주차장에 세우고 출퇴근해야 하는데, 그 교통비로 월 10만 원 책정한 것도 못 주겠다는 겁니다.”

“안전을 생각하면 편도 300킬로미터가 넘어가면 숙박을 하고 다음 날 운행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천과 부산을 왕복하는 경우, 꼬박

18~19시간을 일하고 공장 앞에 차 대놓고 몇 시간 짹잠 자면서 일하고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화주와 운수업체들은 운송에 필요한 각종 비용 외에 인건비(임금)를 별도로 책정할 수 없다고 버틴다. 참으로 도둑놈 심보다.

심지어 사용자들은 벌써부터 안전운임제 시행을 무력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 안전운임제로 운임이 오르면 화물 노동자에게 지급하던 유가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재정을 화주나 운수업체에 지원해야 한다는 조삼모사식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 화주들이 유가보조금만큼 운임을 낮춰 온 상황에서 월 100만 원 수준의 유가보조금이 폐지되면 안전운임을 통한 운송료 인상은 헛일이 된다.

안전운임제 도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 걸었던 한 가닥 기대도 배신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화물 노동자가 하루 13시간, 월 9000킬로미터 이상을 운행해야만 ‘적정소득’을 보장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하루 8~9시간 일해도 적정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부 안대로라면 안전운임제를 통해 ‘화물 노동자에게는 권리를, 국민에

게는 안전을’ 도모한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질 뿐 아니라, 경기 악화로 물동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화물 노동자들이 ‘적정소득’을 보장받기가 요원해진다. 게다가 문재인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도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이처럼 사용자들과 정부가 이런 계약안들을 내놓고 있어 안전운임위원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안전운임위원회 구성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화주와 운수업체가 각각 3인, 공익위원이 4인을 차지하고 화물연대의 몫은 고작 3인이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어느 정도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일단 받아들이고 내년을 기약하자는 의견이 있는 듯하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않냐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측과 정부가 온갖 계약안으로 안전운임을 누더기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면, 화물 노동자들이 강력한 힘을 보여 줘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장우성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기간제교사노조가 노조 설립을 두 차례 반력한 한국 정부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했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10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교육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예고 국가인권위도 권고 예정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사 차별 문제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하기로 했다.

2017년 전국기간제교사노조(전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인권위에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여러 차별 문제들을 진정한 바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호봉 승급, 성과급, 연수 기회, 각종 수당 등에서 차별받는 다.

포상에서도 제외되고, 여러 복지 혜택들을 받지 못한다. 단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라면 기본으로 적용받을 생명보험 가입(맞춤형 복지 제도'의 일부)에도 제외되어 있었다. 이는 차별적 복지 문제를 밝히 드러냈다. 물론 그 뒤 맞춤형 복지는 기간제 교사도 적용받도록 개선됐지만, 다른 여러 문제들에서는 차별이 여전하다.

인권위는 포상 제외, 복지 포인트 차별 문제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공식 결정문은 11월 중순에 발표된다.) 진정을 제기한 지 2년 만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 기간과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으며 설움을 삼켜 온 기간제 교사들에게 반가를 소식이다.

한편, 조만간 교육부도 기간제 교사의 호봉 승급 차별에 대한 시정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와 달리

계약 중 근속 연수가 오르거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곧바로 호봉이 오르지 않는다. 기간제 교사들은 해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처지인데, 계약 시점의 경력만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임금 차별이다.

성과

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 교사 약 1000명을 비롯한 1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호봉 승급 차별을 해결하라는 운동을 해 왔다. 교육부가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활동의 성과다. 교육부는 호봉 승급 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시정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인권위와 교육부의 차별 시정 방침은 그간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기간제교사공대위)가 여러 차례 촉구하고 제기해 온 결과다.

2년 전 기간제 교사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 농성, 서명운동 등 많은 활동을 해 왔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말 못하고 속앓이하던 기간제 교사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쳐 싸우면서, 학교 내 비정규직의 현실을 밝히 드러냈다.

기간제 교사들이 싸움에 나서자 '기간제교사공대위'가 결성되는 등 지지와 연대로 확대됐다.

10월 16일 기간제교사노조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과 민주노총의 도움을 받아, 정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력이 부당하다고 ILO에 제소도 했다.

정부는 노조 규약에서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이는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에 대해서만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이른바 '쪼개기' 계약) 등 구직과 재직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의 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기간제 교사의 노조 결성 권리를 원천 부정한 것이다.

이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반력의 근거가 된 법률을 폐지하라고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10월 16일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공대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산하 법률원 등 여러 노동·사회 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노조 설립을 반력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ILO 제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인 노동권인 노조 할 권리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인권위 권고와 교육부의 호봉 승급 차별 시정이 실질적 개선 조치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주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있어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

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역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 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되어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연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노동자 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군/구까지)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별과 억압, 죽음으로 얼룩진 15년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임준형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거주 이주민이 242만 명을 넘었다. 한국 전체 인구의 약 4.5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중 110만~120만 명 정도가 노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취업 자격으로 한국에 온 이주민은 약 58만 명이고, 그중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약 28만 명이다.

과거보다 이주민의 구성이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정부가 노동력을 얻기 위해 들여오는 이주민의 절반 이상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다.

올해로 시행 15년이 된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극도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 받아 왔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작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한다. 체류 기간이 4년 10개월로 제한되고, 연장하려면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족 동반도 금지된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종속시키는 구조다.

‘현대판 노예제’

고용허가제 도입 전까지 이주노동자 유입을 관리·통제하던 제도는 산업연수제였다. 산업연수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연수생’ 신분을 부여해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작업장 변경을 금지했고, 체류 기간도 최대 3년으로 제한했다. 고용주의 여론 압력은 일상이었고 현지 송출기관의 높은 수수료 요구 등 비리도 만연했다. 그래서 ‘현대판 노예제’로 악명을 떨쳤다.

1995년에는 네팔 산업연수생 13명이 명동성당에서 몸에 쇠사슬을 감고 구타 금지, 체불임금 지급, 여권 반환, 한국인과 동일한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일이 벌어졌다.



2004년 고용허가제 철폐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

저임금, 장시간·고강도 노동, 고용주의 폭력에 시달리던 이주노동자들은 차라리 작업장을 이탈해 미등록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고용허가제가 국회에서 통과된 2003년 7월 당시 이주노동자의 78퍼센트가 미등록 상태였다.

이런 현실이 알려지며 산업연수제 폐지 요구가 계속되자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고용허가제 도입이 추진됐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사용자들의 필요에 따라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단기적으로 공급한다는 전제 위에 설계됐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지만 작업장 이동 금지, 정주화를 막기 위한 체류 기간 제한 등 산업연수제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이어졌다.

마침내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7월 고용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의 안착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노무현은 고용허가제 도입 전후로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을 벌였다. 오랫동안 미등록 체류하며 한국에 적응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머무른다면 고용허가제의 안착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살인적인 단속 추방은 처음부터 고용허가제의 일부였다.

이에 맞서 벌어진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은 380일 동안 지속됐다. 이 투쟁을 통해 이주노조가 건설됐지만 정부는 이주노조 지도부를 수차례 표적 단속했다. 이주노조는 무려 10년의 투쟁을 통해서 비로소 합법화될 수 있었다.

산업연수제에 비해 고용허가제가 차악이라고 여겨 지지했던 이주민 지

원 단체들은 고용허가제 도입 후 독소조항을 개정해 이 제도를 고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정부는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기업들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정해 왔다. 특히 2012년에는 사업장을 변경할 때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를 직접 고르지 못하고 사업주들의 선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개악했다. 2013년에는 미등록 체류 방지 명목으로 출국한 이후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사실상 퇴직금을 강탈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는 숙식비를 임금에서 강제로 공제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통상임금에 비례해서 숙식비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면 공제되는 숙식비도 덩달아 오르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다.

이주의 자유

문재인은 고용허가제의 부분적인 개선은 물론이고 황교안이 박근혜의 권한대행 시절에 시행한 이 지침조차 철회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집권 이래 지속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이주노동자 2명이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했다.

이처럼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변화과정, 그리고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살펴보면 고용허가제의 틀을 유지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과 안정적 체류권, 가족 동반의 권리 등이 보장돼야 한다.

한편, 운동 내에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주노동자에게 완전한 취업의 자유를 보장하면 내국인의 일자리와 임금에 악영

향을 끼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업종 이동 제한 등은 그대로 둔 채 사업장 이동 제한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대안을 내놓곤 한다. 사업장 이동 제한은 없으나 업종 제한의 구속을 받는 방문취업제를 모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 확대하자거나, 이주노동자에게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할 권리를 주되 고용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만 취업할 수 있게 하자는 등의 주장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업종 제한 등을 유지하면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처우가 열악한 3D업종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과거 민주노동당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노동허가제 법안 초안을 마련했을 때에도 이주노동자들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일자리 부족과 저임금 등은 자본주의 경제 위기와 정부·사용자들의 통틀어 정적에서 비롯하는 것이지 이주노동자 유입 탓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차별로 저임금 노동자 층이 형성되면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는 압력이 되며, 실업과 저임금의 책임을 정부와 기업주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에게 돌리게 돼 단결해 저항할 능력이 약화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내국인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키는 데도 해롭다.

따라서 이주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노동할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노동3권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일시 : 2019. 10. 20(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증가

위험의 ‘이주’화 낳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소리 없는 죽음이 늘고 있다.

공식 산재 통계에 따르면, 산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수가 2016년 71명에서 2018년 13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6월 사이 발생한 산재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질병과 부상까지 합하면 한 해에 이주노동자 산재는 7300여 건에 달한다.

이조차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 여러 보고서들은 산재의 실제 규모가 정부 통계의 13~30배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2008년 이진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등). 이주노동자의 경우 산재 은폐가 훨씬 더 많아 그

숫자는 더 커질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은 한국인의 6배가 넘는다.

언론을 통해서도 이주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많이 들려왔다. 10월 12일에는 한국에 들어와 일한 지 2주밖에 안 된 23세 네팔 이주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사망했다. 7월 31일 목동 빗물 저류시설 참사에서 미얀마 노동자가, 9월 10일 영덕에서는 오징어 가공 공장에서 베트남 노동자 1명과 태국 노동자 3명이 질식사했다.

8월 14일 속초 건설 현장에서는 승강기 추락으로 한국인 노동자 4명과 이주노동자 2명이 크게 다쳤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옮

겨져 치료를 받는 대신 몸을 숨겨야 했다. 미등록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신상이 드러나 강제 추방될까 봐 걱정했던 것이다.

죽음의 족쇄

미등록 노동자들은 심각한 산재를 당해도 침묵을 강요받는다. 법적으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도 높다. 애당초 “산재”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영세한 작업장의 경우 미납한 산재 보험금을 몰아서 내야 한다거나, 미등록 노동자를 고용한 데 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사장들은 절대 산재

신고를 안 하려 한다. 사장들은 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체류자로 신고할까?” 하고 협박하고, 산재 신청은 커녕 치료비조차 월급에서 공제해 버리기 일쑤다.

경찰을 불러 “불법체류자니 데려가라”고 한 사례도 있다. 산 값에 힘들고 위험한 일을 시키다가 다치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를 일회용품처럼 버리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에 등록된 노동자들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노조로 조직돼 있지 않으면, 언어가 서툰 개별 이주노동자가 사장과 싸우고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산재를 입증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후 일자

리를 부지하기도 어렵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내 손가락을 잘라간 저 기계가 무섭다. 제발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고 사정해도 사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한다. 2017년 한 네팔 노동자는 병을 치료하러 고국에 다녀오게 해 달라는 부탁을 사장이 거부하자 좌절한 끝에 자살을 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장애를 얻거나 시체가 돼 고향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

김승주